

월요광장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최근 계속되는 뜨거운 논란들을 보면서 지식인의 의미를 생각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부정과 분열의 앞줄에는 언제나 지식인들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우리 현실 또한 다르지 않다. 한 대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최고의 전문기관이 자랑하던 공신력은 웃음거리가 되는 지경이다. 보통사람의 눈으로는 앞과 뒤를 이해할 수 없는 아수라장의 중심에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다.

지식인은 누구인가? 행동하는 철학자이며 프랑스 지식인을 상징하는 사르트르는 지식인과 지식전문가를 나누어서 말한다. 지식이 많다고 곧 지식인은 아니라는 의미다. 지식전문가와 지식인은 지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쌍둥이처럼 닮기는 했으나 지식 사용의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니 이 정도면 지식인 양성이 과잉 아니냐고 할 만하다. 이런 현상은 '하는 것이 합'이라는 근대적 신화가 지배하는 현실을 보며 단연한 일이지 싶다. 그런데도 우리 사

회에 진정한 '지식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지식인들은 왜 '지식인'이 아닌가? 사르트르에 따르면 지식인의 조건은 지식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지식인과 지식전문가의 차이는 자신의 지식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한 곳' 차이가 역사를 바꾸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지식전문가는 주어진 현실의 모순 속에서도 자신의 지식을 그저 '방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지식이 어떻게 쓰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고용'이 보장되고 '방법'만 안전하다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지식전문가들을 지배 계층을 위한 '파수꾼'이라고 불렀다. 파수꾼의 지위에 오른 지식전문가는 무소유의 전문가적 권한을 휘두른다.

반면에 지식인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아니다. 지식인은 누구의 지시나 위임 없이 스스로 진실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지식전문가와 달리 자신의 지식을 권력의 한 언저리를 차지하거나 안락한 삶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지식은 휘두르기 위한 권력이 아니고 자기모순을 발견하고 극복하는 토대다. 그래서 지식인은 인간

다운 삶의 권리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려는 세상의 건설을 자신의 의무로 여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인은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다. 이런 지식인의 역할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유명한 드레퓔스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1894년 프랑스 군부는 드레퓔스 대위에게 독일의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중신형을 선고했지만 사실 드레퓔스 대위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반유대주의적인 사회분위기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군부는 오히려 진범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을 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소설가 에밀 졸라는 분노했다.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글을 썼고 많은 지식인들은 기꺼이 동참했다. 결국 드레퓔스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에밀 졸라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에서 나온 것이고 이 용기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지식인에게 진실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참담하지만 한 편에서 들려오는 용기 있는 '지식인들'의 소리가 진심으로 반갑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전문가의 길을 예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 젊은이들은 '전문가란 실수를 하지 않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전문가에게는 지식을 독단적 권한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전

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라고 호소한다. 즉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에서 현실 상황의 본질을 본다. 단순히 권한과 기득권을 고집하는 한 전문 분야의 '권대'에게 보내는 비판만은 읽을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이들이 짊어 내는 지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 모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음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없는 곳에는 어떤 미래도 없다. 은폐된 어제의 잘못이 내일의 삶을 불행과 고통으로 파괴한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고 실천이다. 선배 전문가에게 지식에 앞서 자기 성찰의 능력을 요청하는 젊은이들 앞에서 사르트르가 나누어 놓은 지식인과 지식전문가의 경계는 맥없이 무너진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어디 지식인과 전문가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하겠는가? 공적이고 사회적 영역의 굵직한 일에만 필요한 용기는 더욱 아니다. 각자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도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무에게도 예외 없는 모두의 책임 아닌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고향세’로 열악한 지방재정 숨통 틔운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새로운 모델로 불리는 '고향세'(고향 기부제)를 도입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고향 세는 기부자(출향민)가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고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최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 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고향세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큰 것은 기부금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지방세를 출향민의 거주지에서 고향으로 옮기는 방식이어서 지자체들의 이해관계로 성사되지 못했다. 가령 서울에 사는 전남 출향민이 거주지에 내야 할 지방세를 고향에 내다 보니 강제성이 있는 세금을 개인이 임의로 바꾸고, 지자체의 지방세를 제로점으로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 반발이 컸다.

이와 달리 기부금은 출향민이 납부

대상을 정할 수 있고, 지자체도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점으로 인식하지 않아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담래하면 농산물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된다.

사실 전남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인구도 적고 산업기반도 취약하다. 때문에 만약 295만 명(통계청)에 달하는 전남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고향 세로 납부한다면 연간 529억 원 정도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법안이 현실화하려면 농어촌 지역으로 제한한 기부 대상과 기부금 납부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부 대상을 농어촌으로 한정할 경우 광주 자치구나 전남 중소도시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를 제로점으로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 반발이 컸다.

불량 교통시설물로 수익 형세 낭비했다니

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 파손이 왜 그리 잦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규격에 맞지 않은 불량품을 썼다는 것이다. 양심이 마비된 업자는 그렇다 치고 감독기관 또한 제대로 규격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한심할 뿐이다.

최근 경찰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규격 검사를 소홀히 해 수익 원의 형세 낭비를 초래한 광주·전남 지역 8개 자치단체 공무원을 무더기로 형사 입건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이에 교통시설물 관련 업체는 합량 미달 제품을 수년간 납품해 수익 원을 가로챘다.

광주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규격 기준이 맞지 않는 교통시설물을 제작·설치한 혐의로 박 모(61) 씨 등 시설물 제작업체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광주시청 공무원 박 모(39) 씨 등 담당 공무원 10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제작업체 박 씨 등은 차선

분리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준 높이에 미달하고 부서지기 쉬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중앙선 침범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차선분리대는 90cm 높이에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해 야 하지만 납품된 제품은 70cm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사산유도봉에 파손되기 쉬운 값싼 폴리에틸렌 캡을 덧씌운 저질 불량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불량 교통시설물임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조달청에서 조달한 다음 물건을 받은 수요기관에서 검사 검사를 하게 돼 있음에도 규격서와 물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서민들의 형세가 낭비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조칼럼

열정페이와 신상필벌(信賞必罰)



김 용 규
광주지방법원 판사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예전보다 살기가 팍팍하다고들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일컫는 용어들이 부쩍 많아지는 것 같다. 필자에게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조어 중 '열정페이'라는 말이 크게 와 닿는다.

'열정페이'는 무급 또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이다. 특히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을 이용하여 일부 기업들(취업준비생들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소위 좋은 직장들)에서 정직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인턴으로 채용한 후 인턴기간이 만료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행태 등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한 상황(고학력·고스펙자들도 취

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는 것으로, 결국 그들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법조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일 뿐이다.

열정페이 이외에 '신상필벌'이라는 용어에도 많은 관심이 간다. 열정페이와 달리 신상필벌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던 용어로 상을 줄만한 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받아야 할 죄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벌을 준다는 의미로, 상과 벌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인물은 여러 명이 있었지만,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한 인물 중에는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 있겠다. 역사서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은 상을 내리고 벌을 집행함에 있어 매우 엄격하였는데, 얼마나 엄격하게 벌을 집행하였는지, 임진왜란 기간 중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휘한 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의 숫자보다 이순신 장군에 의해 군법 위반 등으로 사형당한 장병의 숫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형벌만 엄격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작은 공이라도 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신분

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심지어 병졸이 아닌 백성이나 노비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에 기록하여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이 신상필벌을 실천한 결과 장병들은 이순신 장군을 믿고 존경하였으며, 진심으로 따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이로 인하여(물론 신상필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장병들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민족의 역사상 최강의 해군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요즘처럼 삶이 팍팍한 상황이라면, 신상필벌과 관련하여 충고와 조언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아 든다. 다시 말해 벌보다는 상을 더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가 열정페이와 신상필벌이라는 두 용어를 소개한 것은 얼핏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용어가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이다. 열정페이는 취업난을 보여주는 현상,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상필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열정페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경제성장이 둔

화되어 저성장의 깊은 늪으로 빠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열정페이의 문제는 일부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산업과 사회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미덕의 하나로 요구되었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정당성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도 더는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의 여러 나라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앞서 본 역사적인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사는 구성원들에게 열정만을 앞세울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열정이 지속되도록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활기차고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정페이의 문제에 관하여 더욱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법조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과연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법조의 여러 영역에 진출하여 있는 법조인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열정페이를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기 고

얼마나 지원을 받은 겁니까



김 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크라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을 리모델링했다. 시멘트 바닥을 걷고 친환경 경 자재로 바꾸고 일부는 흙 집을 그대로 살렸다. 집안에 있는 침대와 골조도 친환경 원목으로 바꾸었다. 사용하는 에너지도 태양광으로 전환하고 투숙하는 여행객에게는 세탁시간과 난방시간 등이 겹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펜션에서 이용하는 것들은 일회용품은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로 30여 분 발표가 끝났다. 듣고 있던 나이가 지긋한 분이 질문을 했다.

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접한 와덴해 돌 아보며 좋은 사례를 보고서 함께했던 우리나라 주민들이 던진 공통된 질문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이다. 자기 돈으로 농사를 짓고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눈 먼 돈이 곳곳에 굴러다니는데 요령껏 가져다 써야 한다. 자기 집을 고칠 때도 갖은 구실을 붙여서 눈먼 돈을 가져온다. 본말이 전도되어도 성과만 좋으면 되니 논 가리고 아웅이 우리세태다.

크라스씨는 처음에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흔들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왜 말쑥한 집을 리모델링하는 거죠.'라고 이어서 질문을 했다. 여행객은 알프스 다 음으로 많이 오는 곳인데 객실 회전율이 보더라도 고칠 이유가 없다. 낡은 것도 아니고 펜션 위치도 사구와 바다로 이어지는 경관도 최고다.

크라스씨가 사는 피터오딩에 대해 알아보자. 독일 슐레시비히-홀스타인주 최대 갯벌관광지이다. 거주민이 4000명이나 외부 방문 소유자가 4천여 명에 이른

다. 연간 35만 명이 숙박관광을 하며 1인당 평균 5일 체류를 한다. 당일관광객만 해도 50만 명에 이른다.

말쑥한 펜션을 친환경 소재로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파트너쉽' 회원이 되기 위해서였다. 필요한 식재료도 모두 유기농이며 지역 파트너 농장과 목장에서 공급을 받는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철도를 이용해서 오는 여행객은 직접 역으로 마중을 나가는 것을 물론이고 작은 혜택도 주고 있다. 친환경 여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가스는 30% 절감, 전기는 40%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숙박비용이 비싼 것은 아니다. 다만 예약률이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높다. 1년에 200일 이상 숙박객이 차고 있으며 대부분 단골손님이다. 주인은 지속가능한 철학과 가치로 펜션을 운영하고 소비자는 믿고 찾는다. 국립공원의 파트너십을 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립공원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신청 후 해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국립공원, 행정

기관, 기존 파트너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 심사가 까다롭다.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더욱 어렵다. 파트너를 원하는 업체나 기관이 활동을 하면서 갯벌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를 논의해 정하기 때문이다. 선정되더라도 그 효과가 여행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뿐이다. 오히려 수익금의 일부를 갯벌과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내놓는다.

크라스씨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집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을 했다. 만약 지원을 받았다면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추진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아들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과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다. 의식주만 아니라 이동수단도 친환경으로 갖춰 여행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無 等 鼓

현대에 수컷보다 암컷이 경쟁력이 있다면 과장일까? 가족만 봐도 암컷의 가치가 훨씬 크다. 소와 돼지·닭 같은 가족들은 모두 암컷이 비싸다. 수컷은 고기가 절기고 노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맛있는 것은 기쁘고 새끼나 알 등 생산력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월등하다. 수컷은 거세까지 하며 품질을 높이지만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며, 사회적 종들이 생존할 것이고 특히 위기에 강한 여성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이면 후진국이면 모두 여성이 5~6세가량 길다.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대체로 여성은 평균수명보다도 오래 살지만, 남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연구도 있다.

암수 교체

수산물의 경우도 비슷하다. 예전의 어부들은 수컷 흉어를 잡으면 생식기를 제거했다고 한다. 암컷이 맛있는 탓에 수컷이 맛있는 탓에 수컷이 쓸모없는 생식기를 없애 암컷으로 속여 팔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꽃게나 주꾸미 등 대다수의 수산물은 암컷이 맛있다. 수컷은 암컷의 산란기 이후에야 셰프들의 간택을 받는다. 물론 일부지만 문어와 새우 같이 수컷이 더 쫄깃하고, 부드러운 것도 있다고 한다.

자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the fittest)에서 말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는 누가 봐도 수컷보다는 암컷인 것 같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서 유일하게 수컷이 선호되는 경우가 있다. 가로수의 태반을 차지하는 은행나무이다.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의 고약한 냄새 탓에 열매가 없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서울시 이후에야 셰프들의 간택을 받는다. 물론 일부지만 문어와 새우 같이 수컷이 더 쫄깃하고, 부드러운 것도 있다고 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작가인 '게미'의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제3인류' 등 여러 소설을 통해 인류의 미래는 여성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는 작고, 여성적

컷인 것 같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서 유일하게 수컷이 선호되는 경우가 있다. 가로수의 태반을 차지하는 은행나무이다.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의 고약한 냄새 탓에 열매가 없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서울시 이후에야 셰프들의 간택을 받는다. 물론 일부지만 문어와 새우 같이 수컷이 더 쫄깃하고, 부드러운 것도 있다고 한다.

예산 여유가 없는 광주시는 암나무가 꽃 필 시기에 개화 억제제를 뿌려 열매를 줄이고 있다. 이 같은 수나무로의 교체도 가로수에 한정될 뿐, 시골이나 산속의 은행은 역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암나무가 최고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